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91
----------	------

발의연월일 : 2024. 8. 13.

발 의 자 : 이용우 · 임미애 · 김기표
송재봉 · 김남근 · 이수진
송옥주 · 양부남 · 김영환
이광희 · 허성무 · 김 윤
김주영 의원(13인)

제안이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7,845억 원에 달하여 역대 최대액을 돌파했으며, 전년도(2022년)보다도 4,373억 원이나 증가했음.

아울러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체불 경험은 정규직보다 1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 노동계층일수록 임금체불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음.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임금체불에도 노동자들은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는, 양해를 강요하는 사업주에게 대항하지 못하다가 결국 체불임금 포기 합의를 종용받거나 사직서를 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이에 우리나라에 만연한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통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체불임금을 계속 변제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근로자도 임금체불 발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형사소송법」에 따른 임금체불 형사처벌 공소시효(5년)와 일치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임금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2조 및 제49조).

다. 명백한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체불임금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액수를 최종 결정하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전액을 변제 또는 공탁한 경우에만 임금체불을 반의사불벌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채불임금등에 대한 지급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임금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2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금등의 채불 기간·횟수 및 채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49조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문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한 자가 피해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변제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이 법 시행일의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37조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p> <p>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p>

<신 설>

② (생 략)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3조의4(채불임금등에 대한 지급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
니한 경우

2. 2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
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
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금등의 체불 기간·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
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
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
성으로 소멸한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

제49조(임금의 시효) -----

<p>른 임금채권은 <u>3년간</u>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p> <p>제109조(벌칙) ① (생략)</p> <p>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 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 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 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서 <u>신설</u>></p>	<p>----- <u>5년간</u> ----- -----.</p> <p>제10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u>다만, 본문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한 자가 피 해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변제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	--